

진보개혁세력과 정계개편 II 1)

조성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

진보개혁진영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200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여권의 분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바람직한 정계개편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첫 번째 문제인 현재의 여권 분열의 원인을 정체성 상실에서 찾는다. 두 번째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범여권 통합 시나리오의 두 가지 형태와 그 근저에 깔려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들을 진단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정치적 통합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

대선을 약 7개월 남겨둔 현재 진보개혁진영은 희망보다는 안타까움에 휩싸여 있다. 한나라당의 소위 '빅 투' 는 모든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질주하고 있고, 비록 내부에서 경선규칙을 둘러싼 파열음과 권력투쟁의 잡음들이 절제되지 못한 채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이미 쟁취한 권력을 누구의 것으로 만드는가의 문제일 뿐이라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현재의 순간에도 무기력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지난 4.25 재보궐선거를 '한나라당의 참패'를 목격했다 하더라도 열린우리당의 정치는 이미 '실종'되었고, 비노(탈노), 중간, 친노 등의 각종 과별로 분열되어 우왕좌왕하면서 작금의 분열상황을 수세적으로 관망하거나 자신의 과별에게 유리한 정치지형을 조성하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여전히 진보세력의 재집권을 바라고 있지만, 아무도 진보개혁세력의 대선승리를 위한 단결의 원칙을 행동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김근태·정동영 두 전직 의장과 노무현 대통령

* 지난 3월 9일 코리아연구원과 프레시안이 공동기획한 특별기획 14호(진보개혁세력과 정계개편)의 글에서 필자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원인에 대한 진단과 정계개편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이 글은 그것의 후속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간의 가치 돌린 설전은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개혁진영의 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진보개혁진영의 전열을 다시 가다듬고 2007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여권의 분열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바람직한 정계개편의 방향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 첫 번째 문제인 현재의 여권분열의 원인을 정체성 상실에서 찾는다. 두 번째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범여권 통합 시나리오의 두 가지 형태와 그 근저에 깔려있는 정치적 이해관계들을 진단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정치적 통합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II.

현재의 시점에서 이른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실패와 분열은 크게 정체성의 상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체제는 사회적 균열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되며 정당의 정체성은 균열구조에 대응하여 이념적으로 일관된 정책을 제시하고 집행할 때 유지·발전된다. 2002년 대선 이후 한국정치의 정당체제를 떠받쳐온 균열구조는 크게 i) 남북문제와 한미관계(남북화해협력 vs. 냉전적 대결, 수평적 한미관계 vs. 한미동맹), ii) 국가와 시장(성장 vs. 복지, 경쟁 vs. 규제), iii) 지역주의(호남 vs. 영남) 세 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계급·계층적 진보로서의 호남중심,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복지와 신자유주의가 과생한 양극화를 해소하는 국가, 그리고 남북화해협력과 수평적 한미관계를 추진하는 정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그러나 “좌파 신자유주의” 라는 표현이 말해주듯 참여정부의 정책은 소위 “좌측 감뺄이를 쳐고 우회전하는” 일관성의 부재를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남북화해협력의 시기에 대북송금특검을 실시했고, 이라크 파병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너무 쉽게 합의했으며, 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지원 중단 선언, PSI 참여 검토, 핵우산 요청 등 남북관계와 한미관계측에서 보수적인 후퇴를 보였다. 아울러 복지와 규제 축에서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 불발, 비정규직 양산, 그리고 최근의 한미 FTA 타결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에 경도되었고, 그 결과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켜 상하위 소득 격차가 8.4배나 되는 나라를 만들었다. 소위 대통령 스스로의 표현인 “가치와 노선” 을 내용적으로 부정한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참여정부가 지역주의 해소 틀에 사로잡혀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이다. 물론 지역주의 해소가 2002년 대선의 주요한 화두였고 참여정부의 근간을 이루는 축이었음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역주의는 상기한 평화적 남북관계/ 한미동맹의 수평화 그리고 복지와 규제의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균열축에서 사회적 갈등을

세력화함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소될 수 있고 진정한 국민통합으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우왕좌왕하는 행보나 보수적 후퇴를 보였고, 영남지역에의 정치적 착근에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급기야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는 등 자신의 집권 대표성을 부정하고 말았다. 그리고 정책에서의 보수적 후퇴는 여당과의 민주적 합의 없이 당을 우회하여 ‘나홀로’ 식으로 추진되어 결국 여당을 무능력한 정치세력으로 낙인찍히게 만들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실질적 주주인 중산층과 서민들의 이탈로 인한 개혁통치연합의 해체는 자명한 결과라 하겠다. 10%대에 불과한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은 이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현재의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다음의 과제가 요청된다. 무엇보다도 참여정부를 비롯한 범여권의 개혁적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반성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한미관계, 그리고 시장과 국가역할에 관한 진보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진보적 개혁성 회복만으로는 부족한데 이는 현재의 여권이 사분오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가올 대선을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개혁통치연합의 대중적 복원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선 진보개혁 정치세력의 새로운 재편이 필요하다. 진보개혁 세력의 정계개편은 두 가지 원칙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하나는 반한나라당 대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나라당과 경쟁해서 승리할 수 있는 단일후보를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다음 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과 간 통합 시나리오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III.

최근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친노그룹의 한 의원은 범여권의 대선구도가 결국 DJ와 노대통령의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두 분의 타협을 통해 영호남이 결합하는 전국정당 또는 후보연합이 가능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오마이뉴스, 07/5/6). 그러나 이는 무척 어려운 과제인데 두 세력의 정계개편에 대한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첫째, 소위 DJ의 “서부벨트 복원론”은 결국 열린우리당, 중도개혁통합신당, 그리고 민주당의 합당, 여기에 국민중심당의 결합 시나리오로 과거 97년 DJ연합과 같은 지역연합전략에 기초한 정계개편의 구상이다. 물론, 호남의 지역주의는 역사적으로 계급·계층적 진보성을 담보해왔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오늘날 남북관계/한미관계 그리고 시장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서 보다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체성 확립과 이를 통한 진보와 보수의 균열구조 정립이야말로 호남의 역사성과 진보성을 내용적으로 계승하는 길이다.

그러나 득표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으로서의 호남에 집착하는 한, 다시 말해 정치세력 간 지역연합의 틀에 갇혀버리는 순간 호남 지역주의의 진보성은 사라지고 오히려 역지역주의에 포획되어

버릴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지역연합론은 두 가지 현실적인 요인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는데, DJ와 JP처럼 지역통합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과 대표 정당이 예전처럼 지역적 패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호남은 2004년 탄핵과 같이 화해불가능한 사건으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열되어 있고 충청 역시 국민중심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연합론은 지역주의 해소를 국민통합의 실질적 명분으로 삼고 있는 노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친노직계의 동의를 구하기는 더욱 어렵다.

둘째, 소위 지역연합론과 대척점에 서있는 시나리오는 바로 대통령과 친노 직계들의 구상으로 소위 “질서있는 통합론”이다. 이 구상은 민주당 혹은 국민중심당과의 통합은 곧 지역당으로의 회귀를 의미하며, 열린우리당의 해체는 스스로 퇴행적 지역정치의 불모를 자임하는 것이라 본다. 따라서 이들의 “창당정신”과 “질서있는 통합” 주장은 결국 열린우리당의 사수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들에게 있어 통합할 명분있는 정치세력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상이 극단적으로 전개될 경우 참여정부의 실질적인 물적 토대였던 호남과의 결별을 의미하며, 결국 우리당 내의 비노(혹은 탈노)세력과 결별이라는 극단적 수순으로 전개될 경우 이른바 영남에서 개혁세력이 의석을 확보하여 지역주의 해소의 전초기지가 되겠다는 “영남민주기지론” 혹은 “영남신당”의 형태를 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호남에서 포스트-DJ를 노렸던 고건, 그리고 충청을 중심으로 범여권 후보를 모색했던 정운찬에 대한 날카로운 정치적 공격과 최근 열린우리당의 해체를 주장하는 김근태, 정동영 두 전직 의장과의 날선 대립은 이러한 구상의 실행과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IV.

이처럼 현재 범여권의 분열 배경에는 범여권의 진로에 대한 정과 간 뚜렷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혁통치연합을 대중적으로 복원하고 반한나라당 연합전선과 범여권 단일후보를 국민적으로 선출할 수 있을까? 현실적 방안으로 이중트랙(two tracks)이 제시될 수 있다.

이중트랙의 첫 번째 길은 제3지대에 반한나라당 대통합신당을 꾸리는 일이다. 통합신당을 제3지대에 다시 꾸려야 하는 이유는 더 이상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통합을 해나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무엇보다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혁적 정체성 상실과 대중의 지지철회에 기인한 바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 통합의 대상이 되는 기타 정치세력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더 큰 통합을 위해 해체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고, 더 큰 틀에서 민주당 내 통합세력, 손학규 전경기지사, 문국현 및 시민사회 내 정치참여 진영 등과 함께 통

합신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통합의 과정이 앞서 언급한 남북관계/한미관계와 시장과 국가라는 두 가지 균열축에서 보다 적극적인 남북관계와 신자유주의의 대안 모색이라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책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의를 바탕으로 두 균열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확대시켜 2007년 대선구도를 진보 대 보수의 구도로 형성시켜야 한다. 둘째, 현실 정치적 고려사항으로 열린우리당내 개혁적 친노세력의 결합을 위해 민주당과 기타 통합대상의 정치세력내 과거 ‘탄핵’ 세력은 통합과정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 최근 민주당의 박상천 대표가 언급한 “참여정부 국정실패의 책임자 및 좌파 배제” 운운은 결국 과거 ‘탄핵’에 대해 면죄부를 얻고 지역구도로 대선을 몰아가자는 것, 나아가 대선에 실패하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호남지역에서만나마 생존하겠다는 얕은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이 통합의 배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친노 진영 또한 호남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 이는 대선을 지역대결로 몰고 가겠다는 지역연합론과는 다르다. 오히려 호남인들이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제반 정치적 쟁점에서 보여 왔던 계급계층적 진보성을 중심으로 정치적 균열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소위 “서부벨트북원론”과 “영남민주기지론”의 최소 공통분모를 찾는 접경지대를 형성할 것이다.

이중트랙의 두 번째 길은 국민후보선출을 위한 국민리그전을 준비하는 일이다. 이는 아마도 형식상 개방형 국민경선제(open primary)라는 모양새를 띠는 것이다. 그러나 설령 제3지대 통합신당이 꾸려진다고 하더라도 범여권의 잠재적인 후보자들 간의 국민경선제 규칙(rule)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란 쉽지 않다. 현재 한나라당 ‘빅 투’ 간의 경선룰과 관련한 격한 내분에서 쉽게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2002년 민주당의 국민경선과 같이 극적이고 감동적인 후보선출과정을 통해 대중의 에너지를 하나로 엮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도덕적 리더십은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해낼 것이다. 현재 시민사회의 움직임은 크게 ‘미래구상’과 ‘통합과 변명을 위한 국민운동’ 중심의 정치세력화 움직임과 종교계와 학계의 원로를 중심으로 한 범여권 “지도자 원탁회의” 추진 움직임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중심으로 통합신당의 틀과 후보자 경선규칙을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통합의 호스트(Host)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 정치정파가 소속한 당의 해체와 더불어 통합신당에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행동을 보일 수 있다. 물론 시민사회내에 독자세력화 움직임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보적 시민단체들 대부분의 경우 2007년 대선과 관련해서 탈정치 중립화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독자세력화의 움직임은 내화외빈의 난관에 봉착해있는 것도 사실인 듯하다. 따라서 시민사회는 통합신당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도덕적인 리더십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 될 것이다.

V.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구상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범여권 예비주자들의 원탁회의를 조속히 성사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민경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는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정당법상 국민경선은 정당이라는 틀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경선추진위원회는 국민경선을 추진하기 위해 제3지대에 신설정당을 창당해야 한다. 현재 여권의 원로급 정치인들이 이 과정에 합류하여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다음 수순으로 범여권의 예비후보들이 소속정당을 탈당하여 신설정당에 합류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재 한나라당을 탈당하여 독자적 행보를 구사하고 있는 손학규 전지사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독자세력화를 도모하고 있는 문국현 사장 등이 결합하는 모양새를 연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러한 시민사회 중심의 대통합에 개혁적인 정파들이 소속정당을 떠나 결합하여 제3지대 통합신당의 기초적 그림을 완성하는 수순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은 국민대중들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민리그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통합신당의 흐름이 진보적 개혁블록 형성을 통해 대선을 진보 대 보수의 세력경쟁의 공간으로 전환시킨다는 원칙 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결론적으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정체성에 입각한 제3지대 통합신당과 국민후보선출을 위한 국민리그전이라는 이중트랙의 동시적 진행은 개혁통치연합을 대중적으로 복원함과 동시에 다가올 대선에서 한나라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2007/05/16)

